

새 정부의 육아정책을 기대한다¹⁾

박상희 소장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5월 10일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10년 만에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국정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며, 5월 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국정과제 발표 전 앞으로 5년 간 육아정책의 근간이 될 아동 및 육아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육아정책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 당선인은 ‘임신부터 육아까지 국가 케어’라는 구호 아래 임신부터 산후 조리, 육아까지 국가가 책임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²⁾ 출산 전까지 건강검진에서 부인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며,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고,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것 등이 공약의 주요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1971년 100만 명대의 1/5 수준으로 줄었고, 합계출산율도 0.84명³⁾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의 공약은 만혼으로 인한 고령임산부가 증가하는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에게 지원되는 정책 공약은 부모 비용 부담 완화와 돌봄 지원 확대에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육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존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평균수당을 합산하여 영아 1인당 월 50만원 수준을 지원하고, 부모에게 연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영아부터 초등까지 국가인증 민간돌보미 지원 확대, AI 기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등 기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가정 내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강화하여 육아 수요에 걸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 국민의 힘 홈페이지 https://www.peoplepowerparty.kr/renewal/policy/data_pledge.do.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pp. 139~146 공약 내용을 요약 발췌함.)

2) 베이비뉴스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04>

3) 한의신문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062

셋째,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는 단계적 유보 통합 공약이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해 있고, 담당하는 행정기관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누어져 있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정책 추진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두 기관 간 교육 여건에서도 차이가 커 영유아들은 생애의 시작점에서부터 불평등을 마주하게 되었다.⁴⁾ 지난 2005년 육아정책개발센터로 시작하여 올해 17년을 맞이하는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필요한 정책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훌륭한 교육과 보육을 받길 원하고, 같은 시작점에 있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보 통합과 유보 격차를 각각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두 기관 간 격차가 줄어들긴 하였지만, 여전히 추가비용, 물리적 환경, 교사의 전문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부모의 지속적인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⁵⁾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 공약 중에도 포함된 유보 통합의 단계적 추진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집중적인 정책과제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들의 첫 출발선에서 벌어진 차이가 줄어들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이다. 지난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은 아직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다행히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서는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견 및 예방조치 시스템 구축, 지자체와 연계 강화, 지자체 아동 학대 예방 전담 조직 지원, 전담 공무원 증원 등 국가 전체의 시스템적 연계 강화를 밝히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가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는 사회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래 세대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는 확대하고, 아이들 식사와 돌봄을 챙겨야 하는 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을 줄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⁶⁾ 부모의 효율성보다는 아이행복 육아의 시각이 좀 더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겠다.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나타나듯이 아동은 권리를 가진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 아직 국정과제가 도출되지 않아 아동 관련 공약이 어떻게 국정과제로 녹아들지는 알 수 없지만, 아동을 존중하는 좀 더 발전된 정책으로 변모하길 바란다.

4)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2022). 제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아교육·보육통합 실현방안 세미나 자료집, p. 24.

5)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2022). 제5차 교육정책 열린대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아교육·보육통합 실현방안 세미나 자료집, p. 24.

6) 베이비뉴스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04>